

## 2025년 대선 인천 환경 정책 제안서

### [분야1] 2030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 영흥석탄화력발전소 2030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 해상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한 해상풍력 발전 방안 마련

### [분야2] 자원순환 정책 개선

- 일회용품 규제 강화 및 탈플라스틱 로드맵 구축
- 민간소각장 반입협력금 즉각 도입
- 생활환경시설 인근 지역 지원 대폭 강화

### [분야3] 연안해양생태계 보호 체계 구축

-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상기인 쓰레기 저감 및 침적쓰레기 수거 지원
- 해양보호지역 확대 및 질적 관리
- 인천경기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 [분야4]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자체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의무화 및 지원
-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 [분야5] 환경교육 강화 및 해양환경교육 확대

- 환경교육 예산 확대
- 환경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
- 해양환경교육 강화

---

제안 단체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들어가며

최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바람 등이 발표한 '2025 기후위기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대응을 실천하며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기후시민'은 전체의 50.9%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민주주의 원칙을 중시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기후민주시민'은 36.0%로 나타났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까지 더 확장되고, 깊어진 것이다. 특히 '기후시민' 비율이 인천은 57.4%로 평균 50.9%을 웃돈 점이 주목할만하다.

인천은 다양한 숲과 하천, 갯벌과 바다, 섬 등 다양한 생태환경을 지니고 수많은 야생동식물이 깃들여 있는 공간인 반면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LNG 등 각종 발전소와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가 위치해 있으며, 항만과 공항, 산업단지, 고속도로 등 최대 환경시설 밀집 지역이다.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산업연구단지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인천에 있다.

인천을 들여다보면 기후위기 대응, 자연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환경 현안과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즉,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대한민국 환경문제의 종합판인 동시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이에 핵심적인 주요 5개 분야 13개 과제별 정책을 제안한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개월간 광장으로 나섰다. 광장에는 새로운 질서와 사회를 외치며 사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생태적 한계를 넘어선 성장과 개발은 특정 지역에 대한 환경 피해를 유발시키고,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해 왔다. 이제는 생태정의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시대 요구다.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에 5월 23일, '기후위기 대응 방안' 주제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회도 열린다.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사회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 그리고 새로 들어설 정부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상상력을 펼치고 실현시키자는 국민들의 바람에 적극 응답하길 바란다.

**과제1. 영흥석탄화력발전소 2030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1. 제안 취지와 현황**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감축을 명시.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석탄과 LNG의 비중을 합친 발전 비중은 40%가 넘는 42.3%로 기후위기 시대 화석연료발전의 더 빠른 감축이 필요.
- 인천은 2030년까지 33.9%의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의 2030년 폐쇄는 인천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목표.
- 영흥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수도권에 공급되고 있으며 2030년 폐쇄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자립이 선결 되어야 함.

**2. 제안 내용**

- 2030년 탈석탄을 위한 석탄발전 폐쇄
- 폐쇄되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LNG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전환.

## 과제2. 해양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한 해상풍력 발전 방안 마련

---

### 1. 제안 취지와 현황

-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목표 14.3GW는 현재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설비용량(약 320.5MW)의 약 4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320.5MW로, 2030년 목표치의 약 2.2%에 불과한 상황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 특별법')은 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된 '환경성 평가'로 대체하고, 28개 인허가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는 내용은 해양 생태계 보호에 대한 우려가 큼
-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보다는 사업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난개발이 우려

### 2. 제안 내용

- 해상풍력 특별법의 해양생태·환경 보전 요소 강화
-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대체하는 환경성평가 제도 강화
-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선정 지정제도(공탁제) 전면 시행을 통한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과제1. 일회용품 규제 강화 및 탈플라스틱 로드맵 구축****1. 제안 취지와 현황**

- 세계 최대 규모 매립지와 소각장 건설 논란이 있는 인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등 근본적인 자원순환 정책 추진은 필수적임.
-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보류 등 자원순환 정책은 역행하고 있음.
- 특히 플라스틱 오염 문제도 심각한 가운데, 폐기물의 사후처리가 아닌 과도하게 생산, 소비되는 구조를 바꿔 나갈 필요가 있음.

**2. 제안 내용**

-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및 일회용품 사용제한 시행
- 탈플라스틱 로드맵 구축 및 법제화
-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 과제2. 민간소각장 반입협력금 즉각 도입

---

### 1. 제안 취지와 현황

- 2022년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며 반입협력금 제도를 도입함. 반입협력금 제도란 자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폐기물을 소각을 위탁하며 지급하는 비용임. 이 제도를 통해 민간소각장의 생활폐기물 처리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4년 12월 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반입협력금 제도를 시행 중이나, 시행 대상은 ‘공공소각장’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민간소각장’은 3년간 유예됨.
- 이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무력화 하는 것으로 환경정의 관점에서 민간소각장에도 반입협력금 제도를 도입해야 함.

### 2. 제안 내용

- 민간소각장 반입협력금 유예 철회

### 과제3. 생활환경시설 인근 지역 지원 대폭 강화

---

#### 1. 제안 취지와 현황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서는 소각장 신규 건설이 선결 과제임.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고, 재사용과 재활용 등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폐기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소각장 등 생활환경시설은 시민들의 기피 시설로 입지 선정조차 어려움.
- 타 지자체, 해외에서는 소각장 등 생활환경시설을 시민들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행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득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그 외 시설은 300미터로 설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2. 제안 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 영향권 범위를 실질 영향범위로 확대
- 생활환경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

## 과제1.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상기인 쓰레기 저감 및 침적쓰레기 수거 지원

### 1. 제안 취지와 현황

- 인천 앞바다는 페어구와 같은 해상기인 쓰레기와 한강, 해안가를 통한 육상기인 쓰레기, 중국을 통한 해외기인 쓰레기 등 해양쓰레기 발생 유형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음.
- 해양쓰레기의 육상기인은 67% 가량, 해상기인은 약 33% 수준으로 추정됨. 육상기인 쓰레기는 육지에서 생산, 사용되다 버려져 하천 등을 통해 바다로 들어오는 쓰레기가 대부분임. 또한 육상 오염원 유입은 해양오염에 영향을 끼침.
-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발생원 차단임. 전문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육상, 해상 발생원에 따른 쓰레기양과 경로를 파악,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함.
- 육상기인 쓰레기 저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미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도 회수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등도 필요함.
-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국적 관심사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 조사활동에 나서고 있음. 민관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함.

### 2. 제안 내용

-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하천쓰레기 관리에 대한 사항을 의무로 규정
- 해양폐기물법을 개정해 해양 유입 하천쓰레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한 전용 선박 지원 확대
- 시민과학자 양성을 통한 지속적인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및 데이터 축적

## 과제2. 해양보호지역 확대 및 질적 관리

---

### 1. 제안 취지와 현황

- 세계적인 생물다양성 위기 속에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확대라는 국제사회 권고에 따라 한국정부도 보호구역 30% 확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2023년 12월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작성함.
- 2023년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정(BBNJ 협정, Agreement on Marine Bio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비준 동의안을 2025년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킴.
-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 해양환경을 보전하겠다고 선언하고, 법적 체계를 갖출 기틀을 마련한 것임. 국내의 내륙보호지역은 17.3%, 해양보호지역은 2%에 불과함. 행정구역상 넓은 바다를 포함하는 인천 특성상 해양보호지역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함.
- 해양보호구역 확대 뿐만 아니라 지정 이후,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실효적 관리체계 수립과 이행 또한 매우 중요함. 해양보호구역이 보호구역으로서의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호구역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함.

### 2. 제안 내용

- 해양 등 보호구역 30% 확대
- 해양보호구역 질적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 과제3. 인천경기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

#### 1. 제안 취지와 현황

-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위원회는 한반도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며 인천, 경기만 등 주요 갯벌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6년 예정) 회의 때까지 확대 등재할 것을 권고함.
- 2023년 기후정치바람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81.1%의 인천시민이 인천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옴. 이처럼 갯벌을 중요하게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는 인천시민은 많으나, 세계자연유산 등재 가능성 지역의 해당 주민이나 지자체는 혹여나 개발행위에 제약이 우려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임.
- 또한 기존 보호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이 공감하고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는 지원이나 관리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임.
- 이미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할 경우, 추가 제재는 없음. 오히려 '세계자연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바탕으로 한 생태관광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함.

#### 2. 제안 내용

- 인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연계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적극 지원

**과제1. 지자체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의무화 및 지원****1. 제안취지와 현황**

- 기후위기 심화와 함께 생물다양성 위기도 심화되고 있음. 경제계에서도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를 향후 10년간 가장 빠르게 악화 중인 글로벌 위험요소로 평가함. 세계경제포럼이 2024년 작성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생물다양성 손실이 지난 10년간 조사에서 꾸준히 상승해 4위를 차지했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음.
- 국제 사회에서도 2022년 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으며, 이에 발 맞추어 한국 정부도 2023년 말,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함.
- 하지만 지자체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생물다양성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생물다양성 전략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해야 함.

**2. 제안 내용**

- 지자체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의무화 및 지원

## 과제2.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

### 1. 제안 취지와 현황

-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절차가 된 지 오래임.
- 특히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사업자의 의도를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결국, 부실 심지어는 거짓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기도 함.
-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관련한 최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2종 업체가 3년여 간 수행한 환경현황조사 100여건이 거짓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함. 이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은 100여건의 거짓내용에 대한 파악을 단 한 건도 하지 못한 채로 평가서 검토를 마쳤다는 의미이기도 함.
- 이에 생물다양성 보전, 무차별적인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함.

### 2. 정책 제안 내용

-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 과제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 및 해양환경교육 확대

### 1. 제안취지와 현황

-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대한민국은 5년마다 국가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은 기존의 환경교육 정책을 평가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
- 인천에는 각종 환경 오염 유발 시설이 위치한 반면, 숲과 공원, 하천, 갯벌과 해양, 섬 등 다양한 자연생태적 특성을 가짐. 특히 해양도시로서 해양환경 보호와 교육이 중요한 지역적 특성을 지님. 환경교육을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실천적 교육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환경교육 예산 확대, 환경교육 기반구축,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확대, 해양환경교육 강화 등이 필수적임.

### 2. 제안 내용

- 지자체 예산 중 1%는 환경교육 예산으로 배정하도록 법제화
- 개정된 환경교육법에 따라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내 생태환경교육 필수과목으로 지정, 사회환경교육 기관 지정 확대 등 환경교육 기반 구축
- 해양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